

<2020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1. 지방재정의 사전예산관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 ②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③ 성별영향평가제도
- ④ 지방채발행

<풀이의 핵심>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

→ 사전이란 예산 편성 및 집행되기 전을 의미하고 사후란 집행된 이후 감사하고, 진단하는 것을 의미함

주체		사전예산관리	사후재정관리
중앙 정부	재정·예산 관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매뉴얼)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개별 부처)	지방교부세 감액제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액 초과 발행)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책관리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성인지 예산제도(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합동평가(국고보조사업)
		성별영향평가제도(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평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제(행정안전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행정사무 감사(지방의회)
		지방채 발행(초과한도액 이내 발행)	재정사업 평가
		성과관리계획	
지역주민		주민 참여 및 감시(주민참여예산)	재정 운영 상황 공개(재정공시) 주민소송제도

<해설>

- ① (X)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은 사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미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므로 사후적 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 ② (O)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으므로 사전관리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③, ④ (O)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고, 지방채의 경우 발행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므로 사전관리제도입니다.

답: ①

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20 군무원 7급

- ㉠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 전자감시의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 ㉠ (X)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을 전자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이룩한 정부입니다. 정부 내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요구 및 참여욕구의 증가 등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 ㉣ (O)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 전자감시의 위험, 정보격차 등은 전자정부의 역기능입니다.

답: ④

3. 윌리엄스와 앤더슨(Williams & Anderson)에 의해 주장되는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② 성실행동(conscientiousness)
③ 시민의식행동(civic virtue)
④ 이타적 행동(altruism)

<풀이의 핵심>

- 1) OCB-I(Individual):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 → 특정한 개인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행동: 이타주의, 예의성
- 2) OCB-O(Organization): 조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 → 일반적으로 조직에 이익을 주는 행동 → 성실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해설>

이타적 행동(altruism)은 조직시민행동 중 OCB-I(Individual)에 해당합니다.

답: ④

4.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시보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 ③ 시보기간 중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의 핵심>

※ 시보임용

- 1)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
 - 정식 채용 전: 선발과정의 일부(시험 과정의 연장),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 판단의 기회 제공
 - 일정 기간: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의 시보기간
 - 실무를 익히게: 실무의 습득기회 제공, 초임자를 훈련시키는 기회 → 지도·감독 필요
- 2) 시보 공무원도 공무원임: 시보 기간 중 보직(직위)을 맡을 수 있으며 시보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됨(다만, 승진 임용은 될 수 없음)
- 3)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해설>

- ① (X) 시보 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반드시 보직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보 기간을 마치고 정규공무원이 되면 임용과 동시에 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 ② (O) 시보 공무원은 직위를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X) 직권면직이 되었다는 것이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 ④ (X) 시보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시보 공무원은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은 아닙니다.

답: ②

5.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분배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한다.
- ② 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높은 반면에 재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낮다.
- ③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이다.
- ④ 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해설>

- ① (O) 분배정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타당성 분석 등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재분배정책은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 ② (O) 분배정책은 갈등이 없어 정책순응도가 높은 반면, 재분배정책은 갈등과 대립이 심하여 정책순응도가 낮습니다.
- ③ (O)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입니다.
- ④ (X) 반대입니다. 도로건설과 같은 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철의 삼각: 의회의 의원-이익집단의 대표-관료)가 주요행위자입니다. 하위정부모형은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합니다. 재분배정책은 대통령 등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답: ④

6.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집합적이고 공유된 공익개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④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해설>

- ① (O) 신공공서비스론은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②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공익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입니다.
- ③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기본원칙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입니다.
- ④ (X)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를 조종(조타, 방향잡기,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통제하는 것)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새로운 방향을 잡고 X).

답: ④

7. 켈리(Kelly)의 귀인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②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달리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③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미래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④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풀이의 핵심>

※ 귀인이론

- 1) 귀인(attribution): 다른 사람의 행동 원인을 설명하는 것
- 2) 귀인의 과정

합의성 (consensus)	동일한 상황에 처한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 ex 부하 직원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소란스럽게 일을 하면 외부 귀인을 할 것임(외부 원인으로 추론)	높음	외면적 요인
		낮음	내면적 요인
일관성 (consistency)	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 ex 한 부하 직원이 매주 여러 번 일관되게 소란스럽게 일을 하면 내부 원인으로 추론	높음	내면적 요인
		낮음	판단 곤란
특이성 (distinctiveness)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지(이창원 외 '새조직론') ex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ex 출장지)에서도 소란스럽게 일을 하면 내부 원인으로 추론	높음	내면적 요인
		낮음	외면적 요인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상이하게 행동하는지(Gilovich et al, 김호섭 외 '행정과 조직행태')	높음	외면적 요인
		낮음	내면적 요인

- i) 내면적 요인에 의한 행동: 그 행동이 그 사람의 개인적 통제 아래 있다고 믿는 행동
- ii) 외면적 요인에 의한 행동: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경우

<해설>

- ① (O) 동일한 상황에 처한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합의성이 높음)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② (O)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상이하게 행동하면, 즉 사무실에서 소란스럽게 일을 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조용하게 일을 한다면 사무실이라는 상황에 소란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특이성).
- ③ (X) 다른 사건에서 미래에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켈리의 귀인이론에서 언급한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 ④ (O) 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반응하면, 즉 한 부하 직원이 매주 여러 번 일관되게 소란스럽게 일을 하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일관성 높음).

답: ③

8.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풀이의 핵심>

※ 블랙스버그 선언

- ① 1987년 Wamsley 등이 주장한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 이상의 관료 공격,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 정치권의 반정부 어조와 같이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 선언
- ② 행정재정립운동(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은 블랙스버그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음
- ③ 특징: 행정우위의 정치행정이원론, 전문직업주의 강조(관료의 전문적 자격, 기술 기준 및 직업윤리 강조)

※ 행정재정립 운동

- ①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 직업공무원제 옹호 →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
- ② 학자: 스바라(J. H. Svara), 워슬리(G. Wamsley), 굿셀(관료제 옹호론자, Goodsell)

<해설>

- ① (X)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1980년대 신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레이건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을 추구하였습니다.
- ② (O) 행정재정립운동은 1987년 Wamsley 등이 주장한 블랙스버그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관료는 전문적 자격·기술 기준 및 직업윤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였습니다.
- ③ (X)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1990년 Osborne와 Gaebler가 주장한 정부재창조론(신공공관리론의 주요이론)입니다.
- ④ (X) 행정재정립운동은 고객중심적 행정과는 무관합니다.

답: ②

9. 민자유치의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20 군무원 7급

- ㉠ BT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민간투자기관이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 BOT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 BO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기간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 BTL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여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신 민간투자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 BLT방식- 민간의 투자자본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해설>

- ㉠ (O) 시설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민간투자기관이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 → BTO
- ㉡ (X)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 →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는 표현이 없음 → BOO
- ㉢ (X)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 기간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 BOT
- ㉣ (O)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 민간투자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 → BTL
- ㉤ (O)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 → BLT

답: ①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수정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 ② 지방환경청은 특별행정기관이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해설>

- ① (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 설치된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아닙니다.
- ② (O)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의 지방환경청 등은 특별행정기관의 예입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 ④ (O) 보통지방자치단체란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답: ①

11.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경험적 조직이론으로서 관료제이론과 행정원리론에서 추구한 보편적인 조직원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 ②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한다.
- ③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 조직설계와 관리방식의 융통성을 꾀한다.
- ④ 독립변수나 상황적 조건들을 한정하거나 유형화하지 않는 유연한 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추구한다.

<해설>

- ① (O)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보편적인) 유일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의 방법은 없다는 명제를 기초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이론보다는 각 조직들에게 적합한 방법은 각 조직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 ② (O)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체제이론을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된 중범위이론입니다.
- ③ (O) 조직구조는 상황변수(환경, 기술,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조직구조, 관리체계, 관리과정 등)과 상황변수가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 조직설계와 관리방식의 융통성을 꾀합니다.
- ④ (X)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변수를 유형화시키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합니다.

답: ④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① (O)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② (O)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③ (X)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O)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답: ③

13.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의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urction)에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20 군무원 7급

- ㉠ 수혜집단(Advantaged)- 과학자, 퇴역한 군인, 중산층이 대표적이다.
 ㉡ 경쟁집단(Contender)-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 의존집단(Dependents)-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 이탈집단(Deviants)- 강력한 제재가 허용되지만 제재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풀이의 핵심>

※ 잉그램(Ingram)과 슈나이더(Schneider)의 사회적 구성론

- 1) 정책의제설정 = 행위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됨: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나 상징, 미사여구 등을 통해 이루어짐
 2) 정책설계는 정치적 과정이므로 정책대상집단의 영향력이 중요 → 정책대상집단은 사회적 이미지(긍정적, 부정적 인식)와 정치적 권력(다른 집단과의 관계, 보유자원, 전문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짐

구분		사회적 이미지	
		긍정적	부정적
정치적 권력	강	수혜집단: 국가유공자, 노인, 과학자, 퇴역군인, 중산층 등	주장집단: 부유층, 거대노동조합, 문화상류층 등
	약	의존집단: 장애인, 아동	이탈집단: 범죄자, 약물중독자, 깡패집단

<해설>

- ㉠ (O) 수혜집단은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정치적 권력이 강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과학자, 퇴역한 군인, 중산층이 대표적입니다.
 ㉡ (O) 경쟁집단은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권력이 강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부유층, 거대 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 (O) 의존집단은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미지는 긍정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아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 (X) 이탈집단은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권력이 약한 집단입니다. 범죄자, 약물중독자, 깡패 집단 등을 의미하며, 강력한 제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이 약해 제재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답: ③

14. 조직의 분권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지식공유가 원활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
- ②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 ③ 기술과 환경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 ① (O)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으면 알아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분권화가 필요합니다.
- ② (X)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수평적 조정을 하려면 상급자가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즉, 집권화가 필요합니다.
- ③ (O)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분권화가 필요합니다.
- ④ (O) 고객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므로 분권화가 필요합니다.

답: ②

15.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풀이의 핵심>

※ 우리나라 예산과목의 분류체계

세입예산 과목의 분류체계	세출예산 과목의 분류체계
관·항·목으로 구분 → 관·항은 입법과목, 목은 행정과목임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분 →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임

<해설>

- ① (X)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지만,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② (O)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입니다.
- ③ (O) 「국가재정법」 제21조 제1항
- ④ (O) 「국가재정법」 제21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답: ①

16. 대리정부(proxy governmen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 ③ 대리정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 ④ 시민 개개인의 행동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시민의식 하에 대리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중요하다.

<풀이의 핵심>

※ Kettle의 대리정부(proxy government)

- 1) 의의: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준정부조직 또는 비정부조직(시민단체)을 의미 → 대리정부는 제3자 정부라고도 하며, 민영화, 민간위탁, 분권화 전략과 관련됨
- 2) 문제점과 대응전략

문제점	대응전략
① 민영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정부와 대리정부 간 정보격차) → 정책에 대한 정보의 왜곡	① 행정관리자는 대리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함
② 대리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음 →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 초래	② 대리정부에 대한 각종 유인전략 활용, 계약사항 철저 관리
③ 민영화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③ 대리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통제

<해설>

- ① (O) 민영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정부와 대리정부 간 정보격차)으로 정책에 대한 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X) 대리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자원의 낭비와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O) 행정관리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다양한 대리정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 ④ (O) 대리정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책임성과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대리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통제가 중요합니다.

답: ②

17.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면허(franchise)-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
- ② 바우처(vouching)-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을 갖는다.
- ③ 보조금(subsidy)- 신축적 인력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 ④ 자조활동(self-help)- 정부의 서비스 생산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해설>

- ① (O) 면허(franchise)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 ② (O) 바우처(vouching)는 쿠폰을 주고 소비자가 직접 공급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③ (X) 신축적 인력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질이나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민영화방식은 보조금(subsidy)이 아니라 민간위탁(out-sourcing)입니다.
- ④ (O) 자조활동(self-help)은 주민 순찰이 그 예이며, 정부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답: ③

18.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근거조항입니다.
- ②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 ②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 ④ (X)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답: ④

19. 공공정책갈등에서 각 프레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정체성 프레임- 갈등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정책의 피해자라는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여 자신들을 범주화한다.
- ② 사회적 통제 프레임-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 해결 당사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 ③ 손익 프레임-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에 달려있다.
- ④ 특징부여 프레임-갈등이슈와 관련된 위험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를 의미한다.

<풀이의 핵심>

※ 갈등 프레임

- 1) 의의: 갈등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틀
- 2) 갈등프레임의 유형(Lewicki)

정체성 프레임(identity frames)	갈등당사자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ex 신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에 연대감이 높은 편이다.
특징부여 프레임 (characterization frames)	갈등상대방이 속한 집단과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규정)하는가 ex 지자체는 신뢰할만한 대화 상대방이다.
갈등관리 프레임 (conflict management frames)	갈등관리 방안과 절차(재판, 폭력 등의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선호 → 갈등 당사자 간 갈등관리 프레임이 유사할수록 갈등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ex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자고 합의하는 경우 갈등해결 가능성 높아짐
사회적 통제프레임 (social control frames)	사회적 이슈들은 누구(개인, 국가 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짐 →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인식
위험 프레임(risk frames)	갈등 이슈와 관련된 위험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 ex 원전은 사고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여전히 위험하다.
손익 프레임 (gain vs loss frames)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평가
상황요약 프레임 (whole story frames)	당사자가 갈등 상황에 어떻게 핵심을 요약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권력 프레임 (power frames)	권력의 원천에 대한 당사자들의 시각

<해설>

- ① (O) 정체성 프레임은 ‘갈등당사자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 당사자인 지역주민은 스스로 원전건설 정책의 피해자라는 특징을 부여합니다.
- ② (O) 사회적 통제 프레임은 사회적 이슈들은 누구(개인, 국가 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 해결 당사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 ③ (O) 손익 프레임은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 ④ (X) 갈등이슈와 관련된 위험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는 위험 프레임입니다. 특징부여 프레임은 ‘갈등상대방이 속한 집단과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규정)하는가’입니다.

답: ④

20.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해설>

- ① (X)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제1항).
- ② (O)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4항
- ③ (O)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1항
- ④ (O)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및 제14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답: ①

2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조직을 개방체제로서 파악하는 입장이며, 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도입되었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접과학의 협동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간행태의 의도에 관심을 가진다.
-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공공재의 수요자들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에 관심을 가진다.
- ④ 역사적 접근방법은 각종 행정제도의 성격과 그 형성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해설>

- ① (O)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개방체제적 관점이고,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아 개별국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도입되었습니다.
- ② (X)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접과학의 협동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간행태를 연구하였지만 인간행태를 과학적·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입니다. 참고로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상학입니다.
- ③ (X)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대응성은 강조하지만 수요자들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에는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 ④ (X) 역사적 접근방법은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보편적인 방법X)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례연구입니다.

답: ①

22. 총체주의적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집권적이며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 ②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편성방식으로 인식한다.
- ③ 목표와 수단 간 연계관계를 명확히 밝혀 합리적 선택을 모색한다.
- ④ 연역법적 방법론에 의하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해설>

- ① (O) 총체주의(합리주의)는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모형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므로 대체로 집권적이며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 ②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세부항목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점증주의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품목별로 전년 예산 대비 조금씩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③ (O) 총체주의에서는 목표와 수단의 연계관계를 명확히 밝혀 합리적 선택을 모색합니다.
- ④ (O) 총체주의 예산은 목표와 수단 분석과 이를 뒷받침할 이론모형을 중시합니다(연역적 접근). 연역적 접근이란 인과관계에 따라 일반이론을 전제로 하여 특수한 다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답: ②

23. 경합가치모형(CVM: Competing Values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내부과정모형은 안정성을 강조해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 ② 합리목표모형은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정보관리와 능률성을 중시한다.
- ③ 인간관계모형은 조직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 ④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유연성과 환경적응성을 중시한다.

<해설>

- ① (O) 내부과정모형은 정보관리와 의사전달을 통해 조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며,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 유지를 주요 조직목표로 간주합니다.
- ② (X)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방체제모형이고 정보관리를 수단으로 하는 것은 내부과정모형입니다. 합리목표모형은 능률성과 생산성을 목적으로 조직의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등을 중시합니다.
- ③ (O) 인간관계모형은 조직 내 인간을 중시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 유지를 통해 조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O) 개방체제모형은 조직구조에서 유연성을 중시합니다. 이 모형의 주된 가치는 자원의 습득과 관련해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답: ②

24.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항상 타당성이 없다.
- ② 타당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작용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 ③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④ 신뢰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 ① (O)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입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높다고 타당도가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② (X)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X)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높습니다.
- ④ (X)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 ①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 7급

- ①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실적주의와 조화되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 ③ 할당제 등으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도 존재한다.

<풀이의 핵심>

※ 대표관료제: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저하, 역차별, 실적주의 저해

<해설>

- ① (O) 소극적 대표성(사회 구성비율 = 공직 내 구성비율)이 적극적 대표성(비례적으로 구성된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해야 함)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X) 대표관료제의 원리에 따라 우대받는 사람 때문에 우수한 실적평가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탈락하는 경우(역차별을 받는 경우),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의 원리가 충돌할 수 있고, 행정능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O)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④ (O) 공무원들이 적극적 대표성을 발휘하여 출신 집단별로 자기편만 드는 경우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 ②